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도11026 가. 관세법위반

나. 상표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신현식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1. 12. 선고 2008노1032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 이하 같다) 제282조 제2항, 제3항은 재산권 침해입법의 한계요소인 과잉금지 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법률임에도 원심은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한 위법

이 있다는 것이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며,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관세법을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하고 그 대상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는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수출입신고의 중요성과 관세법의 입법목적, 관세법상 몰수·추징규정의 징벌적 성격 및 그 추징가액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액만이 추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또는 재산권 침해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물품의 국내 이동과 비교하여 물품의 국제간 이동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바14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대법관 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

주 심 대법관 전수안 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